

■ 국가교육회의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2018. 6. 5.)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를 공론화한다 면서 편파적인 방안을 미리 제시한 이유를 밝히십시오

- 일시 : 2018. 6. 5. 11시
-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국가교육회의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2018. 6. 5.)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를 공론화한다 면서 편파적인 방안을 미리 제시한 이유를 밝히십시오

- ▲ 지난 5월 31일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발표된 세부 내용을 확인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대입제도 종합안 마련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판단되어 매우 우려스러움
- ▲ 공론화 범위에 대한 비판①: 수능 평가방식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면 절대평가 안과 상대평가 안의 세부내용이 상대평가 안으로 결정을 유도하는 것처럼 편파적으로 구성됨.
- ▲ 공론화 범위에 대한 비판②: 국민의견 수렴과정인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논의하기 부적절하다고 평가된 ‘학생부위주 전형과 수능위주 전형간 비율 검토’문제를 공론화 범위로 포함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음.
- ▲ 공론화 범위에 대한 비판③: 당초 교육부가 대입제도 종합안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제시한 쟁점은 △수능 절대평가 여부와 수능 시험 범위, △고교내신 절대평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 △고교학점제 등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정책이었음. 그러나 현재 국가교육회의가 선정한 공론화 범위를 보면 △고교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등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은 실종됐으며, △수능 시험 범위,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 결정은 교육부에 넘김. 당초 약속한 대입제도 종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임.
- ▲ 공론화 범위에 대한 비판④: 입시부담 완화 및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수 방안인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 여부가 논의에서 실종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위의 내용에 대한 해명을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에 요구하는 바이며, 8월 대입제도 종합안 확정까지 남은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대입제도를 반드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지난 5월 31일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발표된 공론화 범위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누락시키거나 다수 쟁점을 다시 교육부에 떠넘기고 있어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 지향적 대입 개편이라는 목표 달성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권역별로 네 차례 진행되었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 마당’에서 공론화 범위로 논의하기 부적절하다고 평가되었던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 비율 문제가 다시 포함되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세부안이 균형을 잃고 마치 어느 한쪽의 안을 도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이송하고 국가교육회의가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는 최근 3개월 간의 과정을 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과 원칙이 실종되겠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작년 8월 대입제도 개편안 확정을 1년 유예하면서 올해 8월까지 확정하기로 약속했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 개선, △고교내신 절대평가,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 △고교학점제 등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정책 마련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론화 범위의 문제점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 대입제도를 개편해 줄 것을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에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국가교육회의가 이번에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의 심각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야기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의 의문점에 대해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에 해명과, 1년 전 유예 시에 약속했던 대입제도 종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론화 범위에 대한 비판①: 수능 평가방식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면 절대평가 안과 상대평가 안의 세부내용이 상대평가 안으로 결정을 유도하는 것처럼 편파적으로 구성됨.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중 첫 번째 쟁점인 수능 평가방식을 보면 마치 상대평가 유지 안으로 결정하려는 듯 세부내용을 편파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2안인 상대평가 유지 원칙을 보면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기존 영어, 한국사에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 과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 시험범위에 ‘통합사회·과학’이 포함되면 이 또한 절대평가를 도입한다고 밝

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범위를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답을 낸 것입니다. 이 안대로라면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위주의 정시 전형 운영이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1] 국가교육회가 발표한 수능 평가 방식 1안과 2안

○ (1안)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 수능 시험 전 과목 9등급 절대평가 전환

2019~2021 수능			⇨	2022 수능	
수능과목	영어, 한국사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모든 과목	
평가방식	절대 9등급	상대 9등급, 표준점수, 백분위	절대 9등급		

○ (2안) 상대평가 유지 원칙

-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상대평가 유지

▶ 아랍어 등 특정언어 쓸림이 있는 '제2외국어/한문'에 절대평가 도입

※ 영어, 한국사는 기존대로 절대평가 유지

2019~2021 수능		⇨	2022 수능	
절대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영어, 한국사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국어, 수학, 탐구	

※ 수능과목 구조에서 모든 학생들이 기초소양 함양을 위해 필수 이수하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이 포함될 경우 절대평가 도입

- 자료출처: 국가교육회의

하지만 1안인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보면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한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1년 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발표가 1년 유예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내용에는 부합하지만 대입에서 변별력이 저하되어 정시 수능 전형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 국가교육회의이송안'에서는 동점자 처리시 원점수를 제공한다는 소위 동점자 처리 방안을 포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론화 범위에서는 동점자 처리 방안으로 원점수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 적용 가능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며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제외'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평가 유지 안에서처럼 예상 가능한 동점자 처리 방안은 무엇이 있다는 정보를 병행해 수능 전형 운영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보를 주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원점수가 '현실 적용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 정보 제공의 균형을 맞춰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9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면 수능 전형은 불가능하고 상대평가 유지 안으로 할 경우만 수능 전형 운영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 공론화 범위에 대한 비판②: 국민의견 수렴과정인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의하기 부적절한 쟁점이었던 ‘학생부위주 전형과 수능위주 전형간 비율 검토’문제를 공론화 범위로 포함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음.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과정을 공론화하는 첫 걸음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 마당’을 권역별로 네 차례 개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한 쟁점 중 현실적으로 논의하기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이하 대입개편특위) 김진경 위원장은 ‘학종과 수능전형간 적정 비율’을 검토하는 것과 ‘수시와 정시 선발시기를 통합’하는 것은 공론화 범위로 삼고 논의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공식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다수 언론이 두 쟁점이 공론화 범위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두 쟁점 중 수시와 정시 선발시기를 통합 여부는 공론화 범위에서 빠지고 ‘학종과 수능 전형간 적정 비율 검토’는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의견을 수렴한 내용과 대입개편특위의 주장이 공식적으로 한 발언과도 일치하지 않는 결정으로 매우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전형 간 적정 비율을 시민참여단이 고정 비율로 해야 한다고 결정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국가교육회의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초 학종과 수능 전형의 적정 비율을 검토하겠다는 쟁점이 공론화 범위 설정 과정에서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위주전형 간 비율 검토’로 바뀌었습니다. 교육부의 국가교육회의 이송안과 달리 적정 비율을 검토해야 하는 전형에 왜 학생부교과전형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 공론화 범위에 대한 비판③: 당초 교육부가 대입제도 종합안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제시한 쟁점은 △수능 절대평가 여부와 수능 시험 범위, △고교내신 절대평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 △고교학점제 등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정책이었음. 그러나 현재 국가교육회의가 선정한 공론화 범위를 보면 △고교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등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은 실종됐으며, △수능 시험 범위,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 결정은 교육부에 넘김. 당초 약속한 대입제도 종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임.

당초 대입제도 개편 논의는 올해부터 고교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새 교육과정에 맞는 수능시험과 대입제도가 필요하다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작년 8월까지 확정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이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고 결국 1년을 유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올해 8월까지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종합안을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결정하기로 약속된 대입제도 개편의 쟁점은 △수능 절대평가 여부와 수능 시험 범위, △고교내신 절대평가,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 △고교학점제 등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정책이었습

니다. 그런데 5월 31일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보면 △고교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등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은 실종됐으며, △수능 시험 범위,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 결정은 교육부에 넘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쟁점을 누락시키거나 다시 교육부에 넘겨 책임 소재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당초 약속한 대입제도 종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공론화 범위에 대한 비판④: 입시부담 완화 및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수 방안인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 여부가 논의에서 실종됨.

또한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여부가 공론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험생의 입시 부담이 가중되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교실 혁명’을 이루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달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8월 대입제도 개편을 1년 유예할 당시 교육부는 분명 내신 절대평가 도입 여부를 올해 8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지난 4월 11일 교육부의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도, 오늘 발표된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실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능의 상대평가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고교내신 상대평가 문제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의 논의에서 제외되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의 확대까지 진행된다면, 고교내신의 중요성이 올라가 학생들의 고통과 더 정밀하게 줄세우기 위한 평가의 제약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선언한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교실 혁명’은 노도 저어보지 못한 채 좌초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상에서 제기한 의문들에 대한 해명을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일정과 교육부 대입 개편 추진 일정을 통해 국민과 약속한 대입제도를 반드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공개 질의

1.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로 설정한 ‘수능 평가 방식’의 1안과 2안 중 ‘상대평가 유지’ 안인 2안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 것과 달리,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 안인 1안의 경우에는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동점자 처리 방안은 현실 적용 가능성 등의 의문이 제기됨으로 논의하지 않겠다”고 제시하는 등 공정한 공론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2안으로 결정을 유도한 것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2. 국가교육회의는 4차례의 '국민제안 열린 마당'에서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이 "서울 주요대학과 지방대, 그리고 전문대학이 교과전형, 학종전형, 수능 전형의 운영 비율이 제각각 달라서 획일적으로 비율을 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학종과 수능 전형 간 적정 비율 검토' 여부를 공론화 범위에 포함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근거를 밝히십시오.

3. 교육부가 작년 8월에 대입제도 종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제시한 쟁점은 △수능 절대평가 여부와 수능 시험범위, △고교내신 절대평가, △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 △고교학점제 등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교육회의가 선정한 공론화 범위를 보면 △고교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등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은 실종됐으며, △수능 시험범위, △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 결정은 교육부에 넘긴 상황입니다.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이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민과 약속한 대입제도 개편 종합안을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십시오.

4.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모두는 대입개편 관련 주요 쟁점이자 고교교육 정상화의 필수 방안인 고교내신 절대평가 도입 여부를 대입개편 논의에서 완전히 실종시킨 이유에 대해서 해명하고 8월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에 어떻게 반영할 지 구체적 계획을 밝히십시오.

2018. 6. 5.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